

‘日매체’ 과거사 반성 韓日관계 전환점 맞나

日매체 “과거반성 뜻 표명해야”
아사히신문 “다시 역사인식 밝혀야”
도쿄신문 “일본도 마이너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분위기가 감지됐다. 일본 매체들이 일제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아베 신조 총리대신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기업 대상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 전선을 구축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보복 전선을 구축한 이유로는 우리 대법원의 ‘과거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우선 아베 정권을 향해 과거사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는 일본 언론은 이렇다. 아사히신문은 17일자 조간에 ‘일본과 한국을 생각한다-차세대에 넘겨줄 호혜관계 유지’이란 사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냉대해서는 안 된다”며 “(아베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과거 반성에 소극적이란 평가가 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씩을 수 없는 불신감이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이 다시 한 번 반도에 관한 역사 인식을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한국 경제보복에 대해서 “양국은 국교수립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금은 한국의 기초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일본경제 성장에도 기여했다. 양국은 이미 호혜관계로 발전해온 실적이 있다”며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 강화로 사태를 복잡하게 한 것은 확실하다.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정치 및 역사 문제를 경제까지 넓힌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도쿄신문 역시 같은날 조간에 한일 간 대화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도쿄신문은 “한일관계의 악화는 일본에게도 마이너스”라며 “아베 정권이 한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본 외신들의 이러한 입장은 문제

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대화로의 해결’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뚝뚝뚝 걸어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 회의 때도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 안 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시간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선지 정계에서는 일본 외신들의 이러한 입장이 일본이 구축한 경제보복 전선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외신들이 일제히 아베 정권을 향해 우리나라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이번 경제보복이 양국 모두에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말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다들 동의를 할 것”이라며 “승자 없는 게임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일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 외신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아베 총리에게 ‘한국과의 대화’를 강조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20일부터 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부터 9월10일 18시까지 총 22일 동안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2차 신청 시기로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학생이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은 재학 기간 중 2회로 제한된다.

다자녀 장학금에만 적용하던 연령 요건이 기존 1988년 이후 출생자에서 연령 무관으로 폐지, 더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하는 게 좋다.

/한용수 기자

자사고 재지정 후폭풍 영재·과학고에 인재 몰린다

영재학교 선호도 4.3%p 증가
선호도 상위 10개 학교 순위 재편
“지정취소 자사고 법원결과 불투명”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발표 이후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중학생 학부모의 고교 선호도가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재지정된 자사고 선호도가 크게 올랐고, 영재학교, 과학고 등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반면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 선호도는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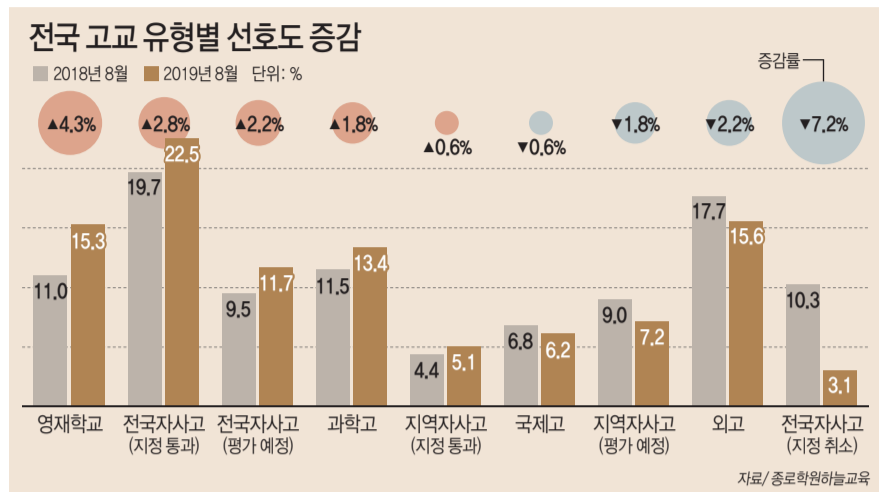
1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5월~17일까지 전국 중학생 학부모 4573명을 대상으로 고교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전년 8월 같은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영재학교 선호도가 전년 11.0%에서 올해 15.3%로 4.3% 포인트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재지정이 확정된 전국단위 자사고 선호도가 지난해 19.7%에서 올해 22.5%로 증가했고, 과학고는 11.5%에서 13.4%로 1.8% 선호도가 올라갔다.

반면, 지정 취소된 지역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는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10.3%→3.1%)으로 크게 하락했다.

내년도 재지정평가 대상인 외고(17.7%→15.6%)와 국제고(6.8%→6.2%) 선호도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선호도 상위 10개 학교의 순위도 바뀌었다.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가 8.8%



로 선호도가 오르면서 1위를 차지했고, 2위 외대부고, 3위 서울과고, 4위 대원외고, 5위 상산고, 6위 세종과고, 7위 경기과고, 8위 한성과고, 9위 경기북과고, 10위 한국과학영재학교 순으로 재편됐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에서 통과하지 못한 지역단위 자사고 중 비강남권 학교들은 사실상 그 지역 내에서 진학실적 등에서 최상위권에 속해져 있는 학교들로 앞으로 법원의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선호도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지역 내 학부모들이 사실상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호도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법원의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호도 하락세는 반전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재지정 통과한 전국단위 자사고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

인다. 학교별 선호도를 보면 전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외대부고였고, 하나고,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원외고가 상위 5위에 들었다.

외대부고의 경우 사실상 경기권에서는 유일한 자사고이므로 재지정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학부모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결국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따른 올해 중3 수험생들의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지정취소된 자사고 법원 처분결과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외고와 국제고는 내년도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다”며 “전국단위 자사고 선호도는 상승해 합격 가능성이 낮고, 일반고간 합격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 등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고교 선택에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치공세” vs “위장 3관왕”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불꽃 공방’ 예고

보수진영 “내로남불의 전형”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부적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원이 고조하고 있다. 야권은 파상공세를 예고했고, 여당은 야권의 공세를 ‘색깔론’이라고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가 납부’ 논란 등을 도마 위에 올릴 전망이다. 야권은 현재 ‘위장 3관왕’이라며 조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에선 민정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책임자였던 조 후보자가 스스로 ‘인사 5대 원칙’을 어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기득권 타파와 정의를 외쳤던 조 후보의 본 모습은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는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다. 또 조 후보자의 사노맹 전력에 이어 채무변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념적·도덕적으로 모두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말인 17일 오전 여름 휴가에서 복귀함에 따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대책회의에선 주광덕 의원 등이 제기한 조 후보자의 채무변제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공세에 나설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파상공세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지 청문회를 앞두고 색깔론과 가짜뉴스 같은 정치공세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야권을 겨냥해 “조 후보자에 대한 역량·전문성·자질 등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며 “과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색깔론 공세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 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